

㉮ **교육부, 사이버 강의 콘텐츠
사업 지원 결과 발표**

교육부는 6월 23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로부터 멀티미디어 교육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강의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53개 대학과 1개 학회에서 498개 과제를 신청, 사이버 강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최종 심사를 거쳐 8월 중순까지 총 50~60개 과제를 선정해 총 20억 원, 과제당 최고 5천만 원의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경쟁률은 10대 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학문 분야별 신청 현황을 보면 공학 분야가 153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사회 과학 94개, 자연 과학 70개, 의·약학 58개, 어문학 44개, 예체능 32개, 농학 16개, 수·해양학 2개 등으로 주로 실용성이 강한 과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경제학 개론, 동아시아 근현대사강의, 프랑스 사회와 문화, 인간 발달과 정신 병리, 흥부방사선과학, 전산 응용 설계, 신경 과학 교육,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등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32개 과목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해 사이버 강의를 실시하겠다고 신청

했다.

또 부산 경성대는 민사소송법, 멀티미디어의 이해, 생리학 가상 공간 실습 등 29개 과목, 원광대는 전산학 개론 등 16개 과목, 배재대는 일본 문화의 이해 등 14개 과목, 연세대는 전기 생리학, 영화의 이해 등 13개 과목, 고려대는 인체 생리학 등 7개 과목을 신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개설하려는 사이버 강의는 대부분 실험이나 교양 필수 과목 등으로 도표, 사진,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각종 자료를 활용, 1학기 분(16주) 강의 내용을 디지털로 제작해 인터넷 상에 띄우거나 CD롬 타이틀을 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 **교육부,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지원 사업 시행 계획 발표

교육부는 6월 29일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고 나아갈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박사 후 연수 과정 및 신진 연구인력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마련, 발표하였다.

'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박사 후 연수 과정은,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300명 이상의 연구 Fellow(국내 1,500만 원, 국외

2,400만 원 내외)에 대하여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00년도에는 BK21 미참여 대학 및 학과로 한정하되, 연구소 또는 연구 기관의 추천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연구소에 근무하도록 하여 연구소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초과학, 인문학 등 기초 학문 분야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96년부터 국내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유능한 신진 연구자들의 박사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신진 연구인력 장려금 지원 사업은, 학문 전 분야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종합 시험을 통과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하여 총 9억 8천만 원으로 1인당 720만 원씩 13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 5개대 의대·한의대
신설 불가**

6월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1학년도 전국 대학정원 조정계획'을 취한 결과 창원대, 목포대, 대불대 등 3개 대학이 각각 40명을 정원으로 하는 의과대학 신설계획을 신청했다.

또 수원대와 동해대는 각각 30명, 40명을 정원으로 하는 한의대 신설을 신청했으며, 강원대와

제주대는 정원 변동없이 기존의 수의학과를 수의과 대학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전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출신의 공급 과잉이 예상돼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맞춰 이들 대학의 신설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의대정원은 41개교 1만9천333명, 한의대는 11개대학 4천560명, 치의대는 11개대 4천500명 등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조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일임하고 있으나 의료인력과 사범계열 모집단위는 정원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의료인력 수급사정 등을 감안, 이들 대학의 신설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 폐업사태 관련 대책으로 당분간 의대정원 동결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정보통신부, IT 정원 늘리는 학교에 600억 지원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T) 관련 학과·전공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91개 학교에 내년부터 2년간 모두 6백억 원을

지원한다. 정통부는 IT 전문 인력이 앞으로 5년간 2만 5천 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보화 촉진 기금을 활용, 내년과 2002년에 각각 3백억 원씩 인력 양성에 투입할 것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대상은 ▶대학원 20개(10억 원씩) ▶대학교 30개(7억 원씩) ▶전문대 25개(5억 원) ▶특성화 중·고교 16개(4억 원씩)다. 정통부는 이외에 올해 70명의 우수 학생을 선발, 15억 원의 해외 유학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5년엔 250명(50억 원)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의 손흥 정책 국장은 “교육부와 협의해 일정, 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새교위, 대학 관련 대통령 보고 내용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가 7월 11일 대통령께 보고한 대학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의학 전문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제(4+3제)의 경우 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학사과정의 법학과나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수업 연한은 3년, 이수 학점은 96학점 이상이다. 졸

업자에게는 사범 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사범시험 응시 자격은 학사 과정 또는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했다.

의학 전문 대학원의 경우 종전 의무직 전환에서 대학 자율 선택으로 입장을 바꿨다. 의학 전문 대학원제는 학사 과정에서 4년간 타학문 분야에서 교육을 받은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4+4 학제다. 의학 전문 대학원을 두지 않는 대학은 현행대로 예과 2년 본과 4년의 2+4제를 유지할 수 있다. 지방 우수 인제가 수도권 의학 전문 대학원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입학 조기 허가제인 학부·대학원 연계 복합 학위 과정을 둔다.

▶ 교원 전문 대학원 설치

사대나 교대, 일반 학과 학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2년간 교사 양성 과정을 거치게 한 후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4+2 체제다. 졸업자에게는 교과 교육학 석사 학위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며, 임용고시시 일정한 가산점(10~15점)을 부여, 실질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시도별로 1~5개 정도의 교원 전문 대학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대학위원회 기능 및 구성

- 기능
 - 고등 교육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심의·의결
 - 대학의 자율화 신장 및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고등 교육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결
 - 고등 교육 기관의 신설 및 폐지, 입시 정책, 인력과 재정 등 고등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결
 - 기타 법률에 의하여 대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구성
 - 위원의 수 : 총 9~15인(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의 자격 : 고등 교육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로서 사회적 명망이 있는 자
 - 당연직 위원 : 2명(교육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 위원 선출 방법 : 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 상임위원 : 전임직 1~3명(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위원의 임기 : 6년 단임(2년마다 위원의 3분의 1을 개선)
 - 위원의 신분 보장 : 임기 보장
 - 대학 위원회에는 10명 정도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어 행정을 지원

☞ 법원, '기성회비 안내면

대학생 지위 보전 불가' 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부장 판사 강영호)는 7월 11일 정구윤 씨 등 한국외국어대생 12명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학생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사건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등 교육법에 기성회비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학교 회계의 일부로 예산에 편성되고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수십년 동안 이를 등록금의 일부로 인식해 별다른 이의 없이 관행적으로 납부해 왔다."면서 "기성회비가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자발적 후원 의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라 해도 재학생 보호자는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기성회 회원으로 간주되므로 기성회 규정에 따라 기성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신청인들만에 대해 기성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면 다른 재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신청인들이 다른 재학생들의 부담으로 재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학교측

이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등록금 삭감 운동의 일환으로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 등만 납부하고 1학기 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기성회비 60만 원씩을 공탁한 뒤 학생으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교육부, 2001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결과 발표

내년도 대학원 입학 정원은 올해보다 모두 5,420명이 늘어난 석사 7만 9,552명, 박사 1만 4,122명으로 확정됐다. 또 정보통신, 북한학, 통역과 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각종 전문 대학원 17개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7월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1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일반·전문·특수 대학원 등 전국 대학원 입학 정원은 석사 4,274명, 박사 1,146명 등 올해보다 모두 5,420명이 증원된다. 이는 2000학년도에 9,396명이 증원된 데 비하면 크게 줄었다.

일반 대학원은 질적 수준을 유

지하기 위해 증원을 되도록 억제해 지난해의 절반 이하 수준인 석사 756명, 박사 716명 등 1,472명만 늘렸다. 전문 대학원은 동국대 영상정보통신대학원, 경남대 북한대학원, 경성대 디지털디자인대학원, 영남대 건축대학원, 숙명여대 임상약대학원, 서울여대 특수치료대학원 등 17개 전문 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등 정원을 석사 820명, 박사 203명을 증원했다. 평생 교육을 위한 특수 대학원은 2,185명, 학과 간 및 학·연·산 협동 과정은 석사 513명, 박사 203명이 각각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대학원은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 생명공학 등 전략적 분야와 학교 특성화 분야, 전문 직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증원을 허용했으며, 대학의 계열별 정원을 총괄 정원으로 바꿔 대학이 스스로 전공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교육부,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 공청회 개최

교육부에서 구성·운영 중인 '국립대학 발전 계획 수립 종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신복, 서울

대 행정대학원장)는 7월 28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거문고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 기능 분화 = 기초 학문과 국가적인 보호 분야, 국가 인적 자원 개발 분야 등을 중점 육성하는 연구 중심대(대학원 중심대)는 9개 대학이 유력하며, 후발 10개 대학은 지역 주민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주는 교육 중심대(학부 중심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개 산업대는 전문 산업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주민의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 교육 중심 대학이 될 전망이다.

▶등록금 차등화 = 4개 유형으로 나뉜 국립대는 각각 중점 육성 분야를 정한다. 중점 육성 분야에 해당하는 학과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등록금이 지금보다 더 싸질 수 있다. 그러나 중점 육성 분야가 아니면 사립대와 경쟁하는 학과·학부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올려야 할 전망이다.

▶책임 운영 기관·특별 회계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희망하는 몇 개 대학이 시범 선정된다. 책임 운영 기관이 되면 총장이 공모제를 통해 선출된다. 총

장은 교육부 장관과 경영 계약을 하고 조직·인사·재정권을 전적으로 일임 받는다. 또 특별회계제가 도입돼 등록금과 대학 수입금을 스스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 시안을 토대로 각 대학별 의견을 종합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 공동안을 마련, 당정 협의 및 인적 자원 개발 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국립대학 발전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부, '사립대도 본고사 금지' 법조항 삽입 추진

교육부는 일부 사립대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시도에 대해 2002학년도부터 사립대들도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본고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7학년도 이후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대는 본고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사립대는 행정 지도로 본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했었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사립대들이 본고사를 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들도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사립대도 본교사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월 중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 35조는 '국·공립대의 장은 학생부를 필수 전형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대학별 고사는 논술 고사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대의 입시 방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법 개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대교협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학년도 입시에서 186개 대학 가운데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31개 대학, 자연 계열의 경우 17개 대학이 지필 고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부, 사학 분쟁 전담 기구 설치

교육부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학 분쟁 해결 개선 방안'을 통해 사학 분쟁 발생시 조사,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할 사학 분쟁 조정 전담 기구 설치를 법제화해 학생과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사학 분쟁 조정 전담 기구는 사립학교법 등에 설치 근거 조항을 두는 형태로 법제화되며, 교

육부 장관 지문 기구 형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현재 사립학교법에 개괄적으로 명시돼 있는 임시 이사 선임 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한편, 임시 이사의 교육부에 대한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학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총장과 이사장의 권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월 21일 내년부터 2005년까지 '인문학 발전 5개년 종합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연구 인력 육성을 위해 7년간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는 '두뇌 한국21' 사업이 이공계에 치중된 것을 보완, '죽어 가는' 인문학을 총체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으로 인문학 부문의 BK21로 평가된다.

인문학은 그 동안 각종 연구비 지원 사업에서 이공계와 사회 과학 분야에 밀린 데다 대학의 학부제 강화로 지원자가 크게 줄면서 '고사 위기', '학문 후속 세대 단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8월 초까지 '인문학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어문학, 사

학, 철학, 한국학 분야의 대학 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 2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원 분야 및 방법, 지원 액수 등은 정책 연구 용역을 맡긴 '인문학 발전 계획 연구' 결과와 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되 일단 내년도에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연구비를 올해(1,200억 원)보다 200억 원 늘려 인문 분야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방식은 논문 공모를 통한 연구비 지원보다 박사 후 과정생이나 시간 강사를 계약 교수로 일정 기간 채용토록 하고 비용을 국가가 대학에 지원하거나 대학 교양 교육을 강화, 교양 학부에 연구자를 많이 두게 하는 방식 등으로 학문 후속 세대의 장기적 육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 교육부, 인문학발전 5개년 종합계획 추진

교육부는 7월 21일 내년부터 2005년까지 '인문학 발전 5개년 종합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은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7년간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는 '두뇌한국21' 사업이 이공계에 치중된 것을 보완, '죽어가는' 인문학을 총체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으로 인문

학 부문의 BK21로 평가된다.

인문학은 그동안 각종 연구비 지원사업에서 이공계와 사회과학 분야에 밀린데다 대학의 학부제 강화로 지원자가 크게 줄면서 '고사 위기', '학문 후속 세대 단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8월초까지 인문학발전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어문학, 사학, 철학, 한국학 분야의 대학 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원 분야 및 방법, 지원액수 등은 정책연구 용역을 맡긴 '인문학 발전계획 연구' 결과와 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되 일단 내년도에 학술진흥 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연구비를 올해(1,200억원)보다 200억원 늘려 인문 분야에 집중지원 할 방침이다.

지원방식은 논문 공모를 통한 연구비 지원보다 박사후 과정생이나 시간강사를 계약교수로 일정 기간 채용토록 하고 비용을 국가가 대학에 지원하거나 대학 교양교육을 강화, 교양학부에 연구자를 많이 두게 하는 방식으로 학문 후속세대의 장기적 육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도순 원장은 8월 1일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상위 50%에 든 수험생의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77.5점으로 예년보다 다소 높았다."며 "따라서 지난해보다 쉽게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가원이 올 수능 출제 난이도를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평균 75점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여서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2~3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수능 예상 응시자는 8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7,000여 명 줄어 대입 단순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1.49대 1)보다 다소 낮은 1.45대 1 수준이 될 전망이다. 원서 교부와 접수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한다.

● 교육부,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교육부(www.moe.go.kr)는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개정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대학 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의 입학 정원을 현행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100분의 5를 100분의 20까지로 확대함.

-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의 수립·공표 시한을 매입학 연도의 전학년도 개시일의 전일에서 전학년도 개시일의 6개월 전일로 변경함

-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예시 열거와 국·공립 대학의 장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하던 것을 삭제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논술 고사 이외의 대학별 필답 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모든 대학의 장이 필답 고사로서 논술 고사만을 시행하도록 함.

- 학생 선발의 일정 중 종래의 특차 모집과 추가 모집을 삭제하는 대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이원화하고, 선발 일정은 교육부 장관이 매입학 연도의 전학년도 개시일의 전일까지 공표토록 하던 것을 전학년도 개시일의 6개월 전일까지로 함.

- 특차 모집에 합격한 자가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특차 모집

의 폐지에 따라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 모집에 지원·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시 모집의 실효성을 담보토록 함.

•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제35조, 제41조, 제42조의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기획예산처, 국제대학원

국고 지원 중단 방침

기획예산처는 8월 8일 내년부터는 국제대학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등 대부분의 국제대학원에 대해 지난 '96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 왔으나 대부분 당초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는 판단에서이다.

원래 국제대학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올해로 끝나게 돼 있지만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간 250억 원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차세대 국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25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하기로 한 '국제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이 같으면서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내년부터는 국제대

학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9개 국제대학원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대학원은 국고 지원금으로 시설 투자를 하지 말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다.

☪ 북한·외국 대학 취득 학점

내년 상반기부터 인정

교육부는 8월 15일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의 대학에서라도 국내의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에 포기한 탈북자가 국내의 정규 대학에 편입하지 않고도 학점 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 교육 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따면 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또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 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되고, 원격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과 외국에서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도 모두 인정된다.

학력 인정 기준 학점은 학사 140학점, 전문 학사 3년제 120학점, 2년제 80학점이다. 이 같은 학점 중 18학점(평균 한 학기 이수 학점) 이상은 대학 부설 평생 교육원이나 학원·기술 인력 양성 기관 등 평가 인정 기관에서 학점을 따라 한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직업 훈련 기관, 대학·전문 대학의 평생교육원, 학원 등 학점은 현재 실시 기관을 현행 323개에서 325개로, 학습 과목을 4,417개에서 5,287개로 각각 늘린다.

☪ 교육부, 전국 고교 성적 관리 실태 점검

교육부는 8월 17일 16개 시·도 교육청에 '전국 고교 1학기 성적 관리 실태 점검' 공문을 보내 과목별 평균 성적이 상식선 이상으로 높게 나왔거나 재시험을 실시한 학교들을 보고토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사전에 암시하거나 기출·참고서 문제 그대로 출제한 경우 학교장을 경고·견책·감봉·정직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성적 부풀리기는 2002학년도 입시에 해당하는 현재 고교 2학년생 이하 학생들부터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뀌자

가급적 '수'를 받는 학생을 늘리기 위해 학교측이 점수를 잘 주면서 나타났다. 지난해 1학기에 전국에서 117개 고교가 적발돼 56명이 경고를 받았다.

대학들 역시 성적 부풀리기에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 모집부터 전체 총점의 70%를 반영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서 수·우·미·양·가 등 평어 성적 대신 과목별 석차 백분율을 활용하기로 했다. 석차 백분율을 쓰면 '수'를 받은 학생이 많을 경우 평어 성적을 쓸 때보다 불리해진다. 한국외국어대는 내년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을 수능 계열별 상위 백분율 성적과 비교해 반영하기로 했다. 수능 상위 백분율을 15등급화해 반영한다는 것이다. 학생부 성적이 좋더라도 수능 성적이 좋지 않으면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이 같은 대학들의 움직임은 지난 3월 수도권 지역 주요 교무처장들이 모여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당수 대학들이 2002학년도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할 때 평어 성적 대신 석차 백분율을 활용할 방침이어서 '수'를 양산하는 일부 고교들의 성적 부풀리기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01년 대입 수능 한 달 앞당겨 실시

교육부는 상당수 대학들이 최근 2002년 입시 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시기를 현행 11월 중순보다 대폭 앞당겨 대학별 전형 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한 것을 수용, 빠르면 이 달 말경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 입시 기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 초 부내 협의를 통해 수능 시기를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으로 지금보다 보름에서 한 달 앞당기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도 협의를 마쳤다. 또 이번 주부터 주요 대학 입학·교무처장과 간담회나 개별 접촉을 갖고, 이달 20일 이후 고교 개학과 동시에 학교 현장과 교총,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어 '2002년 입시 기본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중순 수능 응시 △12월 중순 수능 성적 통지 △일주일 후 졸업 고사 등으로 이어지던 고 3의 학사 일정엔 큰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여 일선 고교에서는 교과 진도 조정과

학생 생활 지도 등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에 입시 기본 계획을 발표키로 한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 이달 말에 '2002학년도 입시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 '자원 봉사 활동 인정제' 도입 예정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8월 21일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정기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상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의 자원 봉사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지방 자치 단체·법인·단체가 취업·임용·진학에 가산점을 주는 등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하면 유사 분야의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되는 전국자원봉사센터는 전국의 자원 봉사 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자원 봉사 지도자 양성 등을 맡도록 했다.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자원 봉사자 교육과 고아원·양로원 등의 봉사 활동을 알선하고 재난 등이 발생하면 봉사자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원봉

사센터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 준다. 자원 봉사자에게는 봉사 활동 중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도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와 직장의 장은 자원 봉사 활동을 장려·지도·관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봉사 활동 지도·육성을 위해 '자원 봉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학교봉사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복수 전공 자격증 소지자 교사 임용 때 우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8월 21일 전공 외에도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相馳)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 소지자를 적극 활용토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특히 교사 임용 때 복수 전공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우대토록 시달렸다. 현재 교사 임용 때 복수 전공 소지자에게는 평균 3~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상치 교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3,500여 명에 이르는 순회 교사를 비

롯, 시간 강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 교사들도 반드시 부전공 또는 복수 전공을 해야 할 형편"이라면서 "장기적으로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대·산업대 박사 과정 내년부터 개설 예정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21일 현행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 과정만 가능한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의 대학원에 박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교대는 교원들의 위상과 초등학교 관리자(교장·교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대는 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박사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2001년 새 학기부터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부, 연구비 카드제 도입

과학기술부는 10월부터 과제별 연구비를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R&D 카드(가칭)' 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카드제가 실시되면 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 카드로만 지출해야 하며, 총 연구비가 카드 사용 한도액이다.

이 R&D 카드는 국내·외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 인출 기능은 없다. 과기부는 우선 10월부터 대학과 기업이 수행하는 신규 연구 과제부터 이 카드를 발급하고, 내년에는 과기부 전 연구 과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드제가 시행되면 연구비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 연구비의 '누수'가 사라지는 등 정부 지원 연구비 관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게 될 전망이다.

과기부 최석식 연구개발국장은 "현금으로 주던 현 연구비 지급 관행이 바뀌면 연구원들도 연구비 부조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